

社說

광주도시철도공사 특별감사, 경영전반 살펴야

연간 37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광주시 감사위가 최근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부적절한 채용 정황이 드러나 심층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면접점수 임의조작, 사정고교 동창회 간부채용과 운전직 편법채용, 무원칙한 채용계획과 절차, 면접관 위촉과정 불투명성, 경력자 무더기 탈락 등 무수한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그동안 계약직을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채용해왔으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채용비리 백화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시민형세를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저버린 처사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역무원과 미화, 시설

등 35명을 뽑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565명이 응모, 15.3대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어 탈락자들의 항의의 여파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감사는 공기업의 사사로운 채용관행을 바로 잡고 유능한 인재가 채용돼 적체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 정치인과 연결된 낙하산 인사와 측근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져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매년 정원의 무기계약직을 30명 이상씩 채용해 직원 수가 10년전 577명에서 907명으로 급증,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 1호선을 10년간 운영하는데 매년 30명 이상을 신규채용해야 할 만큼 인력수요가 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김에 채용과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공항 이전 전향적 입장’은 올바른 판단

윤장현 광주시장이 꼭 막혀있는 광주공항 이전문제와 관련 새로운 옵션(선택지)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존 ‘군공항 이전 후 민간공항 이전방침’ 대신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2월 광주시가 군공항-민간공항 분리 이전 방침을 정한 지 10개월 만의 변화다.

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군공항 다 가면 그때 주겠다’는 것은 미래비전이 없는 논리”라며 “지금 당장 어느 시기를 못박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갖고 자연스럽게 군공항도 가면서 민간공항 통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에너지산업 등 모든 일들에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KTX가 개통되면 15분 거리로 세계를 향한 창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강건한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향적인 대안들을 스티디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어떤 형태든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동의를 이끌어낼 단초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로 민간공항 기능 이전을 택한 것이다.

현재 광주공항은 국내선만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KTX개통으로 이마저도 승객 감소로 횡수가 줄어드는 등 수송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무안공항 역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윤 시장의 발언은 적절한 처방이 될 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시장의 광주의 경계를 뛰어넘는 발상이 군공항 문제를 풀어내고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 시장의 발언은 적절한 처방이 될 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필자는 요 며칠 ‘내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한 아주대병원 이국중교수 말을 몇 번이나 되씹어보았다.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중증의상센터’의 열악한 상황이 이국중 교수에게 솔리사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말이다.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아워’는 중증의상환자에게는 금쪽같은 시간으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귀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생사를 떠나들며 수술하는 분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의사로서 사명감이 남달랐던 이국중 교수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정작 자신은 과로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한다. 생명을 다루는 절실함과 의사에게 매달리며 호소하는 간절한 가족들을 보면서 “외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보다 수명이 길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국중 교수의 남은 시간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면, 보통사람인 국민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50대인 필자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자 85.4년, 남자 79.3년이었다. 65세 기준 한국 노인의 기대 여명도 여자 22.6년, 남자 18.4년으로 OECD 평균(여자 21.1년, 남자 17.9년)보다 각각 1.5년, 0.5년 길었다. 이 기준으로 필자의 기대여명은 32년 이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32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에 편승하면서 그 많은 노인들과 함께 어떻게 32년을 꾸려갈 것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 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 사회’였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이 47세였던 조선시대에는 61세 회갑을 넘기는 것이 큰 축복이어서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했지만 요즘 회갑 쇠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61세를 넘기는 것은 보편적이다. 옛날보다 30~40년 오래 산다는 것은 반기운 일이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수명만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0~75세’ 42.7%, ‘76세 이상’ 60.2%로 전체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빈곤에 처한 노인들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고사하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독거노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201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

률은 10만 명당 58.6명으로 전체 자살률(26.5명)의 2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국가가 노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50대에 일손을 놓고 20년 이상 노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이다. 연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국가도 고스런 일이고 노인 서너명을 위한 각종 사회비용을 줄이는 이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젊은이들로서도 험거운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노령층 노동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일터의 정년 연장이나 파트 타임을 확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들 ‘숙련공’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고급화하는 일 등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노인 복지 향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일들은 노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상에 서 심리적으로 편치 못한 청장년층 등을 위한 일이며 결국 커다란 국가적 과제 하나를 풀어나가는 길이다.

초고령사회의 일원이 되는 필자는 지금부터 노령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장기계획을 세울 생각이다. 노령에 진입하는 국민이 미리 노령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경우 국가가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이고

단해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마지못해 삶을 이어가는 노령의 삶은 불행하다. 일찌감치 일터에서 내몰려 축적해 놓은 재산도 없이 가정과 사회에서는 냉대를 받고 사회 복지마저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은 삶이 지옥이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는 각종 질병에 시달려도 돌봐주는 곳 없이 근근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도 국가도 불행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불과 10년 뒤에 0%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단연컨대, 지금 대한민국 최우선 국정과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인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100조원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 실패다. 그동안 수백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100조원을 투입한 애를 더 날게 하기 위한 전략은 실패했다.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보면 고령대책도 실패를 거듭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때다. 지금까지는 가정을 중심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와 단체가 협력하는 팀 어프로치 형태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요양서비스도 과도기인 현재는 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급자가 많아지면 재가서비스가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ssnam48@kjdaily.com

현장칼럼



안수경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사·교육학박사

생각의 유연성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곡의 흐르는 물은 보습시오. 물은 돌에 부딪히며 굽이굽이 흐르지만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어루만지며 이동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무고한 양민의 살생을 멈추어야 합니다”

칸은 구처기와 대화를 즐겼으며 점차 마음을 움직여 살육 금지령까지 내리게 된다. 구처기는 칸의 잔혹한 살육을 멈추게 했다하여 ‘일언지살(一言止殺)’로 더욱 존경받게 된다. 20여년이 넘도록 더 강해지는 칸의 정복욕을 바꾸게 한 것은 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구처기의 유연함이었다.

협력하는 학교문화로 개선해가는 혁신학교에서는 회의가 빈번한 편이다. 학교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주가 되고 수업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업무처리 때문에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수업

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 있는 삶을 꾸리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연구에만 매진해도 하루가 모자랄 판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업무상 관행을 없애고 자 새로운 업무경강 방법에 대해 자주 논의한다.

학교 뿐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도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더 넓은 각도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은 진정한 협의가 아니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협의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내 주관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경력이 쌓일수록 교육에 대한 주관이 단단해져서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때 필요

한 것이 생각의 유연성이다. 때에 따라 생각의 유연성은 심리적 상태도 중요하다.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상태가 초기화되면 다양한 과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의 유연성은 연습으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타인과 협력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의 양은 연습을 통해 줄어든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책과 강연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것이다. 둘째, 사고의 경직성을 풀고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혀서 불필요한 힘을 빼도록 노력해보자. 셋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평소 만나는 지인들과의 까리까리 대화는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되 딱딱하게 굳어져 녹슬지 않도록 생각에 유연함을 담자.

한 것이 생각의 유연성이다. 때에 따라 생각의 유연성은 심리적 상태도 중요하다.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상태가 초기화되면 다양한 과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의 유연성은 연습으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 타인과 협력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의 양은 연습을 통해 줄어든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책과 강연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것이다. 둘째, 사고의 경직성을 풀고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혀서 불필요한 힘을 빼도록 노력해보자. 셋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평소 만나는 지인들과의 까리까리 대화는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되 딱딱하게 굳어져 녹슬지 않도록 생각에 유연함을 담자.

독자투고

화재예방의 시작, 작은 관심으로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요즘 소방서는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 다시 한 번 분주해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3413건으로 3만8240건의 화재가 실화로 인해 발생했다.

이 중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대

부분을 차지했다.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는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의 피복 벗겨짐·단선 여부 확인하고 기구의 전력소비량이 큰 만큼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 주택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6.5%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6명 중 185명(60%)이 주택화재로 사망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이후 미국(2002년 보급률 94%)은

사망률이 55% 감소(5865명→2670명)했으며 영국(2001년 보급률 81%)은 사망률이 34% 감소(732명→483명)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재난은 한 순간에 다가오지 않는다. ‘취급이 땀을 무너뜨린다’는 말처럼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쌓여 언젠가 우리 가정이 화마에 휩싸일 수 있다. 부디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

/남순우·영양소사 119구조대

주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일제·민주화 운동 시대를 겪어오며, 수사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권

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찰업무 처리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현명한 판단과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경찰에서는 인권경찰로 개혁하기 위해 조직 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찰청에 인권보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경찰청 내부에서 인권 관련 영화제나 영상상을 제작하는 등, 국민들에게 경찰은 인권침해기관이 아닌, 인권수호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의 열린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백연우·해남경찰서 화원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그래픽 뉴스

대학생 10명 중 6명 “학업 아니라 취업이 지상과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는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이 아닌 취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절반가량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진로교육 지원체제와 진로·취업 관련 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중·고등단계에서 실시하던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올해 대학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283개 학교 진로교육, 취·창업 지원조직 담당자와 교수, 학생 2만8천247명 등 모두 3만6천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대학생 중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대학생 60.0%·전문대학생 59.7%)였고, 학업(대학생 25.2%·전문대학생 26.1%)은 그다음이었다. 졸업 후 진로계획으로는 취업(대학생 62.4%·전문대학생 68.4%)을 생각 중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대학생 22.0%, 전문대학생 15.1%)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취업을 원하는 직종이나 기업(전 학년 평균)은 대학생의 경우 공무원·교사(23.6%)와 공공기관·공기업(20.0%)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대기업(19.8%)이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생은 중소기업(28.4%)과 대기업(24.6%), 공무원·교사(15.4%)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울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